

## 국 내

### 중소기업, 韓電과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 한전,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계획」 확정, 시행
- 2006년까지 중소기업에 약 650억원 규모 지원
- 연구개발 촉진, 구매확대, 기술이전 등 중점 추진

한국전력은 원자재난, 고유가 등으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를 지원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장을 역임한 한준호 사장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상생의 경영을 펼쳐, 서로 Win-Win하는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경영 의지를 밝힘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촉진, 구매확대, 기술이전, 마케팅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 제도를 혁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해 2006년까지 약 65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활발한 기술 개발 및 전력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한전 구매물량의 50%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전력공급설비 신뢰도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중소기업 지원확대 주요 내용

먼저 한전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 협력연구개발 사업의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 정보화기술개발 사업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한도를 높였으며 ▲ 유망 전력벤처 · Single PPM 인증기업 · 연구과제 수

행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견학 및 연수비용의 75%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협력연구개발 사업 : 송배전분야의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개발성공제품 구매 사업

※ 정보화기술개발 사업 : ERP(전자적자원관리) 형태의 정보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또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 개발선행품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우수 연구개발 제품을 2년간 구매보장하며 ▲ 협력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제품을 시범 사용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신속히 구매를 추진하고 ▲ 2단계(규격, 가격) 경쟁입찰 시행시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며 ▲ 여성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유기술을 개방하여 중소기업에 이전」하기로 하고 ▲ 중소기업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보유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술이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고 ▲ 이전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비도 5억원 한도의 범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마케팅 활동의 지원」을 위해서는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 전시회 참가를 각각 연간 6회까지 지원하고 ▲ 한전 납품실적기업 및 연구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비용의 75% 수준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전기(重電機器) 기술개발 기금의 융자 이자율을 4%에서 3%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등 이번 한전이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계획」은 연구개발의 촉진에서부터 판로확보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걸쳐서 지원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한전은 6개 발전자회사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한전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전력그룹사로 확산시킬 예정이며, 중소기업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지원 제도 정책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Win-Win 전진대회, 지원사업 설명회, 조찬회 등을 개최하여 수시로 중소기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 이를 통해 “한전과 협력하여 일을 하면 반드시

시 성공한다"는 Success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韓電,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 "부조리 신고 포상제" 시행, 불법하도급 신고시 2천만원 까지 포상
- 배전공사 감리용역 업체, 모두 전자입찰로 선정

###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개요〉

- ◇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 (6. 1 시행)
  - 개념 :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인지한 사내 직원 및 외부인이 관련업체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고대상 : 한전 시행 준공사(배전공사, 송변전공사, 통신공사 등)
  - 포상내용 : 사안별로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
- ◇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7. 1 시행)
  - 개념 : 회사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사내의 부조리를 인지한 직원이 직원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고대상 : 모든 부조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 포상내용 : 수수금액 또는 사순금액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
- ◇ 부조리 자율신고 포상제도 (6. 1 시행)
  - 개념 : 외부인(업체, 고객 등) 및 당시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원이 수수내역을 24시간 이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고대상 :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현금, 상품권, 선물 등 실체가 있는 것)
  - 포상내용 : 수수금품액의 25% (최고 50만원)

한국전력은 전사적인 부패추방 운동의 일환으로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 내부고발자 포상, 자율신고 포상」 등을 골자로 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배전공사 감리용역 제도도 대폭 개선하였다.

올 3월 한준호 사장은 취임사에서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한전"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으로 부패추방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민원업무 부패근절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일환으로 부조리 신고 포상제와 배전 감리용역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 □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주요 내용

####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

한전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일괄·위장·재하도급 등)을 근원적으로 방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신고대상은 한전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배전·송변전·통신공사 등)이며,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하는 직원이나 외부인에게는 신고대상 공사 계약금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접수는 전국 한전 사업소에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한전 부조리 신고전화(☎080-355-3300), 신고 사이트(<http://www.kepco.co.kr/clean/>)로도 가능함. 또한 공동·단체 명의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전은 이 제도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고, 이에 따른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건설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전은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계약시 불법하도급방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불법하도급 적발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내부고발자 포상제도 〉

또한 한전은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내부고발자 포상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지침"을 6월 1일 제정 공표할 예정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내부 직원과 관련된 모든 부조리를 신고대상으로 하며, 신고직원에 대해서는 수수금액 또는 사손(社損)금액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을 할 예정이다.

### 〈 자율신고 포상제도 〉

아울러 금품수수에 대한 직원들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여, 업체의 금품제공과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자율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관계업체, 고객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이며, 회사 인트라넷 「자율신고센터」에 금품수수 후 24시간 이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수수금액의 25%(최고 5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됨.

### □ 배전공사 감리용역 제도 개선

용역비 3천만원 이하 배전공사 감리용역의 업무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업체선정방법을 5월부터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전자공개입찰로 변경하였다.

또한 그동안 자체감리를 해왔던 도급비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배전공사에 대해서도 6월부터 감리 전문업체를 선정·운영할 계획에 있어, 향후 공사 시공품질 향상과 불법하도급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청렴계약서'를 받고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전의 윤리경영 노력에 적극 협력, 동참하기로 하였다.

**- 매출 5조 8,662억, 영업이익 6,941억, 당기순이익 1조 479억원 -**

**- 전년 1분기 대비 영업이익 57%, 당기순이익 89.2% 증가 -**

한국전력의 2004년 1분기 결산 결과, 영업이익과 외화평가 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39억원 늘어난 1조 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21억원 증가한 6,941억원으로 집계. 이는 판매전력량 증가(5.6%)에 따라 영업수익이 호조를 보인 반면, 구입전력 비용 증가폭이 "03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구입전력량 4.5% 증가), 기타 예산도 간축운영을 한 결과이다.

외화평가이익은 원화강세로 인한 환율하락에 따라 1,881억원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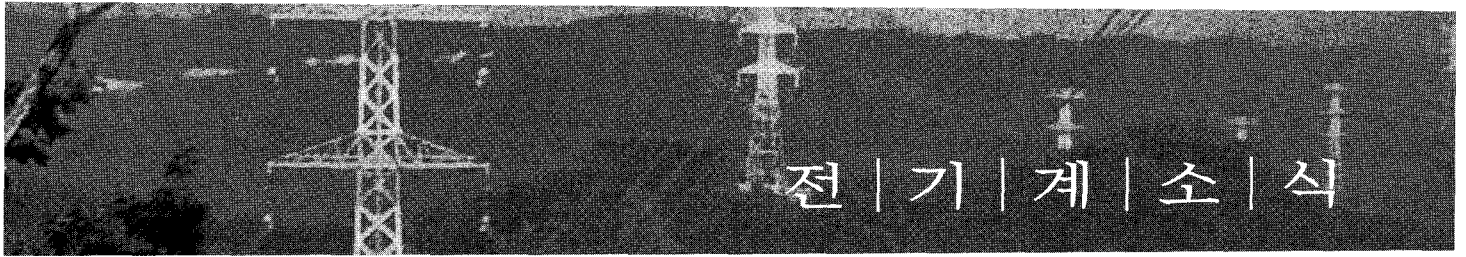
한편 부채비율은 2003년도 기말 대비 1.4% 증가한 51.4%이다. 자산총액은 전년 기말 대비 1조 973억원 늘어난 57조 5,670억원. 이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의 증가로 유동자산이 3,280억원 늘어나고,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6,761억원 및 기타 932억원 등의 증가로 고정자산이 7,693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채 규모는 미지급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등 일반부채가 7,944억원 증가하여 전년 기말 대비 7,252억원 늘어난 19조 5,522억원이다. 자본총액도 "03년 당기순이익 처분에 따른 잉여금 증가에 따라 전년 기말 대비 3,721억원 증가한 38조 14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한국전력공사, (합)대광전기의 『전선로 가지지 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무정전 교체공법』

### 전력신기술 제18호로 지정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일 전력신기술 제18호로 한국전력공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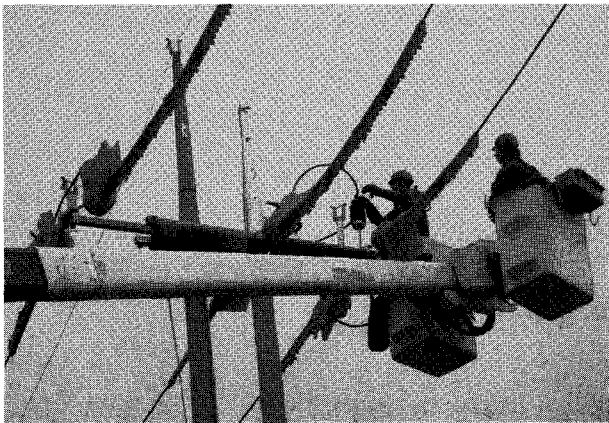


(합)대광전기에서 공동 신청한 “전선로 가지지 장치를 이용한 직선주 무정전 교체공법”을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전력신기술로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전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기술로 지정되면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신기술의 심사전담기관인 (사)대한전기협회는 한국전기연구원 등 4개 관계기관의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전력신기술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에 보고 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합)대광전기에서 공동 개발한 기술은 전선로 교체 활선작업시 임시가설 전주나 바이패스케이블공사를 하지 않고 교체 대상 전선로에 접근하여 전선로를 오가크레인으로 임시 가지지하고 교체공사를 시행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가지지 장치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는 직선주 무정전 교체공법의 새로운 기술이다.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대한전기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열람 및 인터넷을 통한 원문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3대사업 본격 착수

**정부 R&D사업중 최대규모 사업 시행(5년간 약 2,500억원)**

산업자원부 김철두 차관은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및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산·학·연·시민단체 관계자들과 5.19(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분야 사업단 출범식에 참석하여 3대 사업단 사업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각 분야 사업단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 및 유공자 표창을 하였다.

이날 사업단장에는 수소·연료전지 분야 홍성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태양광분야 김동환 고려대 교수, 풍력은 이수갑 서울대 교수가 각각 임명되었으며, 수소·연료전지분야 임태원 현대자동차 부장, 태양광분야 안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풍력분야 전중환 포항공대 교수 등 6명에게 관련분야 육성에 기여한 공으로 각각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산자부는 이날 3대 사업단의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371억 원을 포함 향후 5년간(04~08) 약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의 정부 R&D사업이다.

산자부는 11개 신·재생에너지원중 기술중요성이 크면서 연평균 20~30%로 급성장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3대분야를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기본 계획(03.12월)」에 따라 집중 육성키로 하고 사업단을 구성하였다.

사업단은 총 1,000여명이 참여하는 분야별, 기술별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관심있는 산·학·연·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운영되는 Open System 조직이다.

- 수소·연료전지는 수소 및 수소Infra, 발전용·수송용·가정용·휴대용 연료전지, 실용화사업 등 7개 분야 527명

-태양광은 박막/유기물 태양전지, 모듈 및 시스템, 기반조성보급 등 5개분야 273명  
 -풍력은 풍력시스템, 기반기술, 보급사업 등 3개분야 225명  
 산자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3개 분야별 보급목표는 다음과 같다.

- 수소·연료전지분야는 연료전지자동차 3,200여대, 수소충전소 설치, 전력용 연료전지 300기, 가정용 연료전지 1만기
- 태양광분야는 주택용 10만기, 건물용 700기, 산업용 1,400기
- 풍력분야는 해상풍력 680MW, 육상풍력 1,570MW 등 총 2,250MW

이러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으로 국내 개발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핵심기술, 엔지니어링기술, 시스템 통합기술을 완성하여 세계시장 공략 및 산업선진화를 위한 한국형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사업단은 1차년도 세부 시행과제를 도출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중이다(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너지보급센터). 과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표준화 사업, 성능평가사업등 기반조성사업도 포함하여 추진 중이다.

- 수소·연료전지 : 수소 스테이션, 자동차용 80kW급 PEMFC 발전모듈 개발, 가정용연료전지 실증연구, 휴대용 50W급 DMFC 시스템, 탄소나노튜브이용수소저장 등 11개과제
- 태양광 : 저가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상용화 개발 등 18개과제
- 풍력 : 1.5MW이상 대형 풍력발전기 개발, 해상풍력 발전기 개념설계 등 10개과제

상용화 보급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별로 자동차제조사, 전기사업자, 건설업계 등 End-User와 생산기업이 중심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 핵심에너지 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분야는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로의 이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설계하여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Power Park 조성 등 기반 구축사업과 표준화 및 안

전, 법령 등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04년 1분기 전력소비 전년동기대비 5.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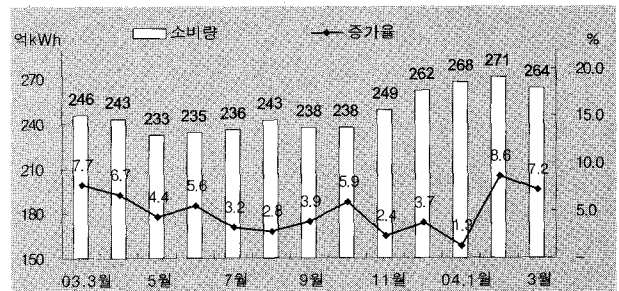
### 3월중 전력소비는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한 264억 kWh 기록

2004년 1분기중 전력소비량은 802억kWh로 5.6% 증가하여 작년 3분기(3.3%) 및 4분기(3.9%)에 비해 높은 증가세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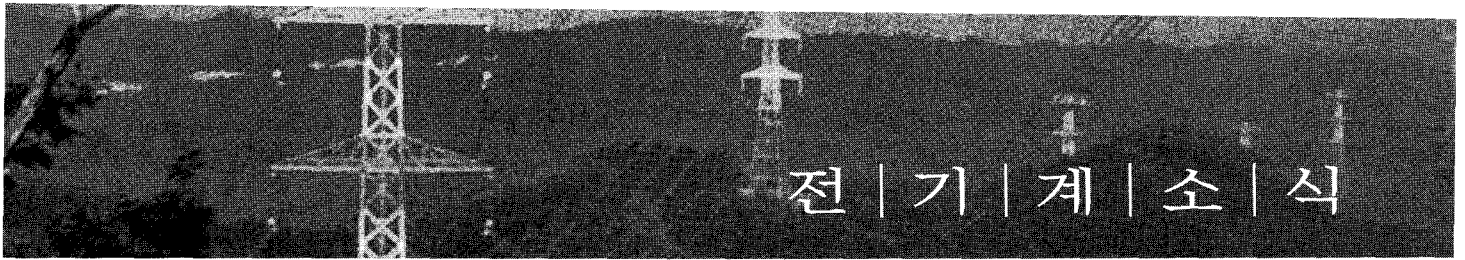
- 2월에 윤일(29일)이 있어 소비량이 1% 정도 증가되었으며, 일반용이 8.9% 증가하여 전체 증가율을 견인

3월중 전력소비량은 264억kWh로 비교적 높은 7.2% 증가하였다. 계약종별은 산업용이 140억kWh로 전체소비량의 53.1%를 차지하여 1월 및 2월에 비해 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증가율은 일반용이 12.2%로 가장 높았고, 주택용도 9.2% 증가한 반면, 산업용은 5.1%, 심야전력은 4.6% 증가하여 전체 증가율보다 낮았다.

제조업 소비량은 127억kWh로 4.6% 증가하였으며, 영상·통신 19.8%, 자동차 10.3%, 화학제품 6.0%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차금속은 0.8% 증가에 그쳤고, 섬유는 5.8% 감소하였다.



〈 최근 1년간 전력소비량 〉



# 전 | 기 | 계 | 소 | 식

## 해 외

### 전력부족 단기해소 어려움 중국 정부의 낙관적 전망 노정 장기적시야에서 원자력 증강

중국의 전력부족은 작년보다 한층더 심각해질 것 같다. 중국정부는 향후 15년정도에 걸쳐 원자력 발전등의 공급력을 대폭 증가 시킬방침이지만 전력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대책. 올여름의 전력부족을 회피할 효과적인 대책은 어려울 것 같다 건설러시에 떠받쳐진 철강·시멘트수요의 증가와 연동하여 무질서한 고정자산투자도 눈에 띈다.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석탄, 전력 등의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전력수급갭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은 적다. 원인(遠因)으로는 정부 예산의 안이성에 있다고 전문가가 지적한다.

장기적인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의 16년간에 원자력발전설비용량을 2700만~3000만 kW 증강, 현재의 8700만 kW를 동기간중에 3600만~4000만kW로 증가시킨다.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이 4000만kW에 달하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4위의 규모. 단기적인 공급력 부족해소로는 되지 못하나 금후에도 급증이 예측되는 전력수요에의 장기적인 대응책. 그리고 석탄의존에서의 탈각이라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 거대한 시장에서의 참가를 겨냥하여 미·불 등 구미기업이 수주확대를 위한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4월에 都內에서 열린 원산연차대회에서 강연한 중국핵공업집단공사의 日新·총경리에 의하면 중국정부에서는 전원구성에서 접하는 원자력의 비율을 2000년의 1.2%에서 2020년에는 4%로 끌어올릴 목표. 현재는 泰山, 大灣 등 8기가 상업운전을 하고 있으면 田灣 등 3기가 건설중에 있다.

2001~2005년까지의 제10차국가 발전 5개년계획에서 2020년까지 발전소의 용량을 9억kW로 증강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있어

구미기업도 중국의 전력시장에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북경에 50명이 넘는 요원을 보내 수주체제를 강화. 미국도 4월에 체니부통령이 중국을 방문. 전문가는 동부통령의 방중목적은 [원자력판매]로 보고 있다.

### 上海的인 절전대책, 공조(空調)설정 28℃이상 시가 민수억제

공조설정은 27도 이하는 안된다. 대기전력을 줄인다…….

전력부족이 심각한 上海市에서는 시행정당국이 [에너지절약형 도시]를 향한 포괄적인 수요억제대책을 내놓았다. 전력공급부족이 올여름에는 400만 k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동시는 대형 아파트나 오피스빌딩, 호텔 등의 공조사용을 제한할 방침을 이미 정하고 있으나 생활수준의 고도화에 연동하여 신장되는 민생수요를 보다더 억제함으로써 올여름의 전력수급핍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인민일보(전자판)에 의하면 上海市가 내놓은 [에너지절약형 도시]구상은 기온이 섭시 235도를 넘어도 공조를 27도이하로 설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외에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전력사용의 피크 시간전에 공조의 스위치를 넣도록 요구하고 있다.

上海의 야경의 심불인 텔레비존타워도 조명을 절전형의 것으로 바꾼다.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절전사양의 조명으로 바꾸고 나아가 직원이 광도를 조정하는 등 철저한 태세이다. 가정등 민생수요를 감소시키는 대책은 모두 시당국이 숭선하여 실시한다.

일본에서는 작년 4월 東京電力의 원자로 17기 모두가 운전을 정지하여 여름철의 전력수급핍박이 염려되었다. 그때 역시 경제산업성이 공조온도를 28도로 설정한다든지 엘리베이터의 가동대수를 반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대책을 호소하여 숭선실행했다.

다만 上海의 전력부족은 작년 여름보다 시막도가 한층 더할 것으로 보여 절박한 상황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요사이드의 관리와 공장의 생산시간쉬프트 등] 만을 생각할 수 있다.[일본에너지경

제연구소)라는 견해도 있다.

## 인도의 다다그룹, 방글라데시 가스산업에 참가

방글라데시에서는 인도의 다다·그룹이 가스이용산업에 참가함으로써 제품수출산업의 실현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에너지 대신이 4월 20일 말하였다. 다다는 가스화력발전소, 비료공장 및 제철공장을 건설하여 그 상품을 국제시장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다다는 이미 이 제안에 관한 FS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다다의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서부지역의 가스도관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용자를 얻을 수 있다. 전자의 다다·프로젝트는 외화획득이라든가 고용기회의 제공 등 방글라데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후자인도관연장 프로젝트는 인도에 대한 가스수출이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있다.

ADB 등의 원조기관과 인도정부는 가스를 인도로 수출하여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방글라데시정부에 요청하여 왔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정부는 국내수요의 50년분 상당의 가스자원을 확인하기까지는 가스를 수출하지 않기로 하여 왔다. 야당은 이전부터 가스수출의 결정은 반정부운동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다에 의하면 계획중인 각 프로젝트에는 일량(日量) 2억 5,000만~ 3억 5,000 입방피트의 가스를 필요로 하며 북부내지는 남부를 건설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천연가스부존량은 20조 5,000억 입방피트로 보여지며 전문가에 의하면 금후 15~20년간의 국내수요를 조달할 수 있다.

ADB는 방글라데시정부에 대하여 인도에 가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관프로젝트의 경제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다·그룹의 제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닷카주제 ADB간부는 [코멘트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다다가 참가하면 서부지역의 도관망을 연장하기 위한 자금조달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도관프로젝트는 방글라데시의 1억 3,000만명여의

약 4분의 1이 거주하는 서부지역에 가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 日新電氣, 설치면적 반인 GIS 2만 4,000V급에서 소형화 고압공기를 처음으로 채용

日新電氣는 19일 세계최소크래스의 2만 4,000V급 가스절연개폐장치(GIS)를 개발하였다. GIS를 구성하는 기기의 집적도를 높혀 도시의 중전기종과 비교하여 설치면적을 반으로 줄였다. GIS를 설치하는 변전소도 소형화할 수 있어 건설코스를 삭감에 기여한다. 대규모빌딩·공장이나 변전소용으로 5월에 판매하며 2007년도 3억엔의 매출고를 목표로 한다.

새로 개발한 GIS[XAE 2V]에는 박형의 [로타리식 3위치단로기]를 내장. 단로기와 어스를 일체화하여 원통용기에 조립, 장치의 소형화를 실현하였다. 동사가 강점으로 하고 있는 고압공기를 사용한 절연기술을 최대한 살린 구조로 되어 있다. 2만 4,000V급의 GIS에 고압공기를 사용한 절연기술을 쓴 것은 세계처음.

[XAE 2V]는 옆길이 50cm, 높이 1m85cm, 안길이 75cm, 무게 750kg. 장치의 소형화로 빌딩내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장치의 반입이 가능하다. 가스처리가 불필요한 절연케이블을 채용하여 설치공사기간도 종래기종과 비교하여 약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설치장소의 형상에 맞추어 GIS를 구성하는 기기를 자유로이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변칙적인 장소에도 설치할 수가 있다.